

학생의날 90돌 맞이, 전국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하다”

- 때 : 2019. 11. 1.(금) 오전 11시
- 곳 : 레이첼카스홀

|| 발표 기자회견 순서 ||

0. 사회 :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2. 시사점과 정책 제안 : 조영선(인권교육센터 들)
3.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3주체 발언
 -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권정오(전교조 위원장)
 -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Korea Teachers & Education worker' s Union (KTU)

[요약] 2019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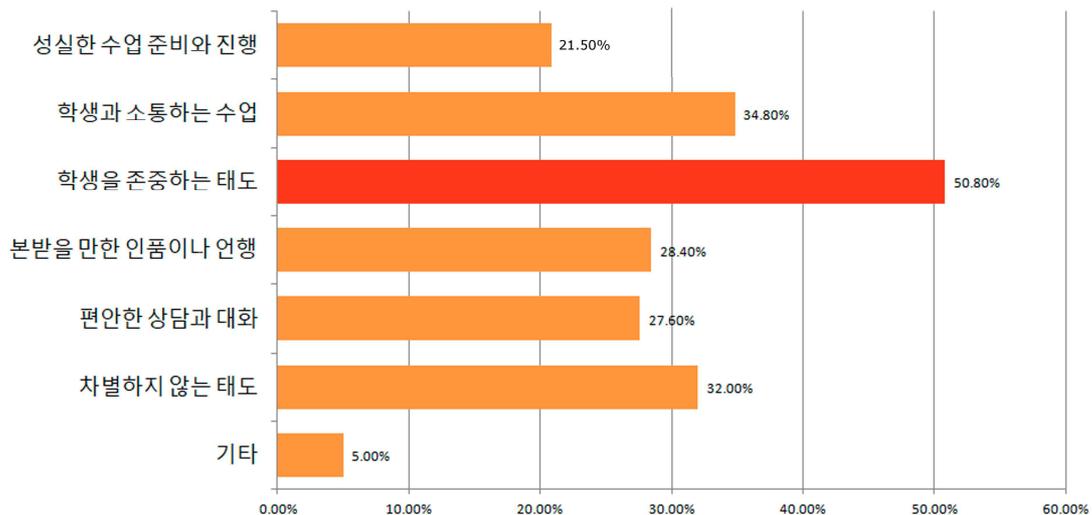
□ 학업 성적과 수업, 학교의 규제와 권위적 문화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

▶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유로 꼽힌 것은, 1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 2위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 3위 ‘학습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 4위 ‘별점제 등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 5위 ‘일방적 지시나 강요 등 권위적인 학교문화’로 나타남. 학습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주된 이유였고, 학교의 비민주적 규제와 권위적 문화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 수업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6%,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0.8%로 대략 3명 중 1명은 수업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음. 또한 학교 수업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문항(복수 응답)에서는 ‘지루하다’ 20.6%, ‘힘들다’ 19.1%로 1, 2위를 차지했고 조사 참여자 중 과반이 ‘지루하다’와 ‘힘들다’를 선택했음.

□ 교사에게 바라는 것은 존중과 소통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2가지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응답)



▶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으로 꼽은 것은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였고 그 다음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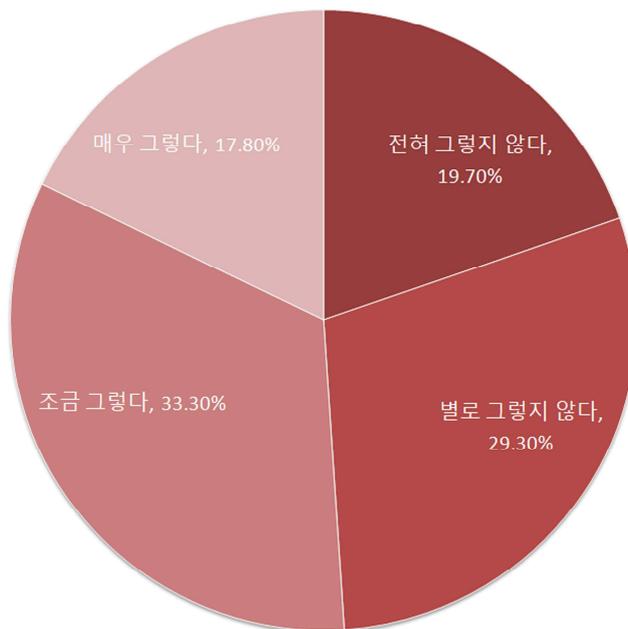
생과 소통하는 수업’, ‘차별하지 않는 태도’였음.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관계, 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 평등한 대우 등이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줌.

▶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27.8%), ‘전혀 그렇지 않다’(12.1%)로 39.9%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음. 또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는 나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준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지 않다’(28.0%), ‘전혀 그렇지 않다’(14.0%)로 42.0%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음.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 편에 설 것이라는 믿음이 충분치 않음이 드러남.

□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참여

▶ 학교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전체의 의견을 조사하는지 묻은 문항에서는 59.4%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40.6%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지 묻은 문항에서는 48.9%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학교 교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나 참여의 효능감은 높지 않음.

“교칙을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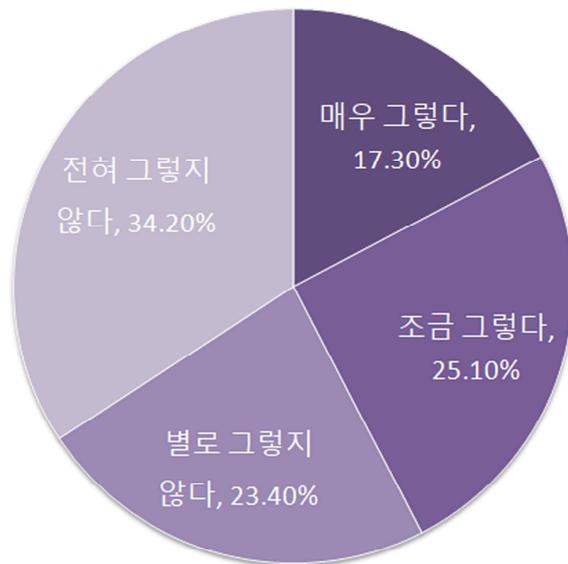


▶ 60.4%의 응답자가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바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56.7%에 이르렀음. 학생 참여가 학생회장 등 대표자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

원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다수 학생들은 알지 못한 채 학생 참여의 확대 및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됨.

▶ “교사에게 혼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참고 넘긴 적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42.4%에 이르렀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학교 현실을 보여 줌.

“교사에게 혼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참고 넘긴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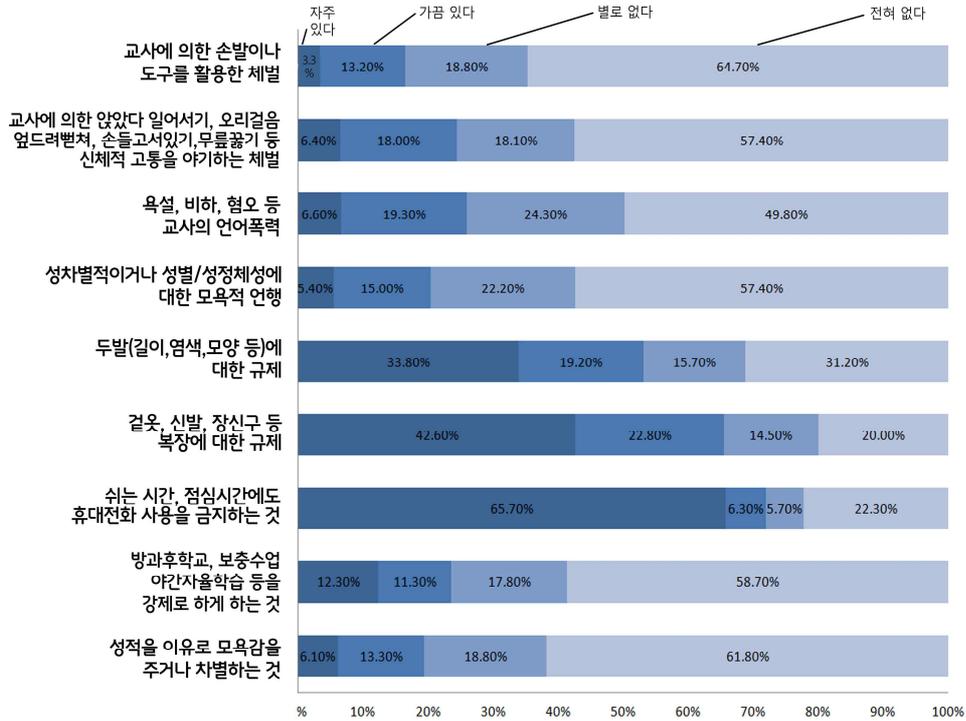


□ 근절되지 않은 체벌, 여전히 일반적인 두발복장규제 등

▶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마땅하고 체벌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여야 함. 그러나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16.5%였고 전혀 없다는 응답은 64.7%에 그침. 교사에 의해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 부담스러운 자세 및 동작을 반복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24.4%에 이르렀음. 또한 이러한 형태의 체벌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71.2%가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없는 지역에서는 52.0%가 전혀 없다고 답하여 19.2%p 차이를 보임.

▶ 교사에 의한 성차별적이거나 성별/성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언행도 ‘자주 있다’ 5.4%, ‘가끔 있다’ 15.0% 응답함. 스쿨 미투 운동을 통해 교사의 성차별적 언행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지금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 두발규제는 전체의 과반(53.0%)이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겉옷이나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는 65.4%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함. 두발복장규제가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인권침해 현상임을 보여 줌. 두발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에 비해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14.6%p 더 적게 나타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두발자유 보장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추정됨.

▶ 수업 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우는 훨씬 많아서, 자주 있다는 응답이 65.7%에 달함. 많은 중·고등학교들에서 일률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금지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56.1%, 없는 지역은 78.2%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더 심각함.

▶ 정규 수업 외의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임에도 참가를 강제하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 중 23.6%가 이러한 보충·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함. 특히 고등학생 응답자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51.2%에 불과했음.

▶ 학교에서 사적 소지품을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압수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임에도, 응답자 중 64.9%는 사적 물품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압수 물품들 중 대부분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화장품 종류였음.

▶ “학교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모두 고르세요 (복수 응답)”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헤어스타일, 옷차림, 화장 등 17.1%, 수업 시간 외 휴

대전화 사용 15.2%, 연애나 친구 관계 14.3%, 화장실 가기 13.0%, 생리결석이나 아플 때 조퇴 12.7%, 학교 밖 활동 10.4%순으로 꼽음. 학생들은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문제의식이 높은 것을 보여 주는 결과.

□ 참정권에 대한 기대 높아

▶ 64.3%의 응답자들은 ‘학생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면 학교생활이나 학생인권이 좋아질 것’이라는 문장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참정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나 학교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음.

2019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 보고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9.10.11. ~ 2019.10.25.
- 조사 주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조사대상 및 방법 :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주요 조사 내용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의식과 학생인권 실태
- 응답자 구성

		응답자 수	백분율	
학교	중학교	1225	42.7%	
	고등학교	1646	57.3%	
합계		2871	100%	
학교종류	국공립	1997	69.6%	
	사립	874	30.4%	
합계		2871	100%	
지역	강원	366	12.7%	
	경기	270	9.4%	
	경남	89	3.1%	
	경북	266	9.3%	
	광주	195	6.8%	
	대구	105	3.7%	
	대전	21	0.7%	
	부산	105	3.7%	
	서울	173	6.0%	
	세종	24	0.8%	
	울산	306	10.7%	
	인천	90	3.1%	
	전남	83	2.9%	
	전북	168	5.9%	
	제주	66	2.3%	
	충남	437	15.2%	
	충북	107	3.7%	
	합계		2,871	100%

2. 실태조사 결과

□ 학교생활이 힘든 이유 ...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성적 스트레스, 숨막히는 학교문화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주요 이유 3가지를 골라주세요.

(최대 3개 복수 응답)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	별점제 등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	학습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빈도	2142	815	1345	1817	
백분율	27.1%	10.3%	17.0%	23.0%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74.6%	28.4%	46.8%	63.3%	
	불편한 학교 시설이나 환경	일방적 지시나 강요 등 권위적인 학교문화	차별이나 무시	기타	합계
빈도	561	596	388	233	7897
백분율	7.1%	7.5%	4.9%	3.0%	100%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19.5%	20.8%	13.5%	8.1%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유로는 1위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 2위가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 3위가 '학습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 4위가 '별점제 등 학교 규칙에 의한 규제', 5위가 '일방적 지시나 강요 등 권위적인 학교문화'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없다는 답¹⁾(83개), 친구 및 선후배 등 인간관계라는 답(35개)이 있었고 그 외에는 교사에 대한 불만, 수행평가 및 과제 부담, 수업 또는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취업의 어려움, 사회 안전망 부족 등의 사회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적인 교육 제도와 학업 부담도 이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의 요인으로는 공부나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휴식시간 부족과 학교의 규제 및 권위적 학교 문화가 주되게 꼽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 응답 수 중 20% 가량은 학교의 규제와 학교의 권위주의적 통제 문화, 차별이나 무시를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공부나 성적, 진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반인권적·반민주적인 학교 안의 문화와 규칙 등이 학생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1) 보기 중 1개도 선택하지 않음.

□ 3명 중 1명, '학교 수업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둘 중에 하나 최근 1년간 학교 관두고 싶다는 생각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교 수업은 내 삶에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590	1265	707	309	2871
백분율	20.6%	44.1%	24.6%	10.8%	100%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도움이 되어야 할 학교 수업에 대해, 약 3명 중 1명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5.4%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0.8%에 이르렀다.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을 한 비율이 64.7%인 것은 긍정적이나, 학생들 중 약 1/3은 학교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현 학교 교육의 문제를 보여 준다.

학교 수업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3가지를 골라주세요.

(최대 3개 복수 응답)

	재미있다	보람차다	흡족하다	새롭다	기대된다	기타
빈도	1220	452	317	601	269	182
백분율	14.5%	5.4%	3.8%	7.2%	3.2%	2.2%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42.5%	15.7%	11.0%	20.9%	9.4%	6.3%
	무섭다	힘들다	지루하다	어렵다	무의미하다	합계
빈도	106	1598	1727	1021	892	8385
백분율	1.3%	19.1%	20.6%	12.2%	10.6%	100.0%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3.7%	55.7%	60.2%	35.6%	31.1%	

학교 수업이 내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응답자 중 과반이 학교 수업에서 ‘힘들다’ 또는 ‘지루하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답했다. 학교 수업이 보람차거나 흡족하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낮은 것과 더불어 학교 수업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적

지 않은 것은, 학교 수업이 상당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론 “재미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재미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지루하다”를 함께 선택한 비율은 500명(4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 내용이나 수업의 방식, 교사 등에 따라서 수업이 재미있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등 편차가 크기에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 “보람차다”와 “무의미하다”를 함께 선택한 응답자는 29명에 지나지 않아, 일관성이 높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졸리다, 피곤하다, 지친다, 짜증난다, 우울하다, 흥미롭다 등이 나왔다.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601	759	611	900	2871
백분율	20.9%	26.4%	21.3%	3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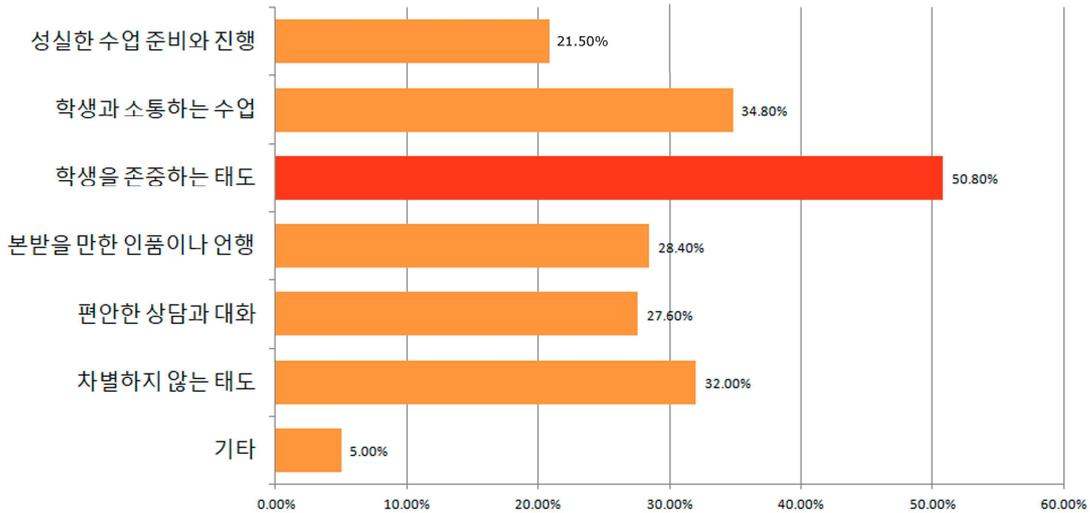
이처럼 성적이나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 반인권적·비민주적 학교 문화, 수업의 효용에 대한 회의 등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된 조사 결과로,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47.3%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20.9%로 적지 않았다.

□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2가지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응답)

	성실한 수업 준비와 진행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	본받을 만한 인품이나 언행	편안한 상담과 대화	차별하지 않는 태도	기타	합계
빈도	616	998	1459	818	791	917	144	5742
백분율	10.7%	17.4%	25.4%	14.2%	13.8%	16.0%	2.5%	100%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21.5%	34.8%	50.8%	28.4%	27.6%	32.0%	5.0%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2가지는 무엇입니까? (2개 복수 응답)



학교 수업에 대해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도, 응답자들이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으로 꼽은 것은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였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과 ‘차별하지 않는 태도’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업무로 강조되는 ‘성실한 수업 준비와 진행’은 10.7%로 가장 하위를 차지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없다는 응답(50개) 외에도 재미있는 수업 등 수업의 난이도나 진도 등에 대한 의견, 두발복장규제 없애기 등 학칙에 대한 의견 등이 나왔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최소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과 소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으로 꼽은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임을 짐작케 한다. 또, ‘차별하지 않는 태도’나 ‘본받을 만한 인품과 언행’, ‘편안한 상담과 대화’ 등을 바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은 것 역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인격적인 감화와 소통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적 관계와 소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 충분치 못한 학교에 대한 신뢰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611	1116	797	347	2871
백분율	21.3%	38.9%	27.8%	12.1%	100%

: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는 나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준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504	1163	803	401	2871
백분율	17.6%	40.5%	28.0%	14.0%	100%

“우리 학교는 학생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매우 또는 조금 그렇다는 응답은 60.2%로 나타났다. 학교가 학생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더욱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하겠으나, 일단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은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홍보나 교육 등을 하고 있는 덕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학교는 나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준다”라는 문장에 대해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0%에 이르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줄리라는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줄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과제일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 불이익 염려되어 침묵

학생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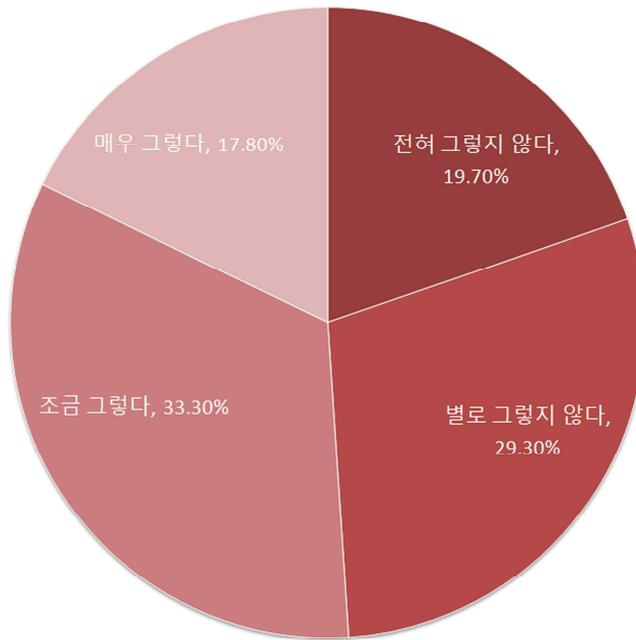
: 학교는 교칙을 고칠 때 학생 전체의 의견을 조사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807	900	656	508	2871
백분율	28.1%	31.3%	22.8%	17.7%	100%

: 교칙을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511	955	840	565	2871
백분율	17.8%	33.3%	29.3%	19.7%	100%

“교칙을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학교 교칙을 고칠 때 학생 전체의 의견을 조사하는지 묻은 것에 대해서는 59.4%의 응답자들이 매우 또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지 묻은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7.8%로 낮아지고, 49.0%의 응답자들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 및 교육청들이 교칙을 제·개정할 시 학생 전체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며, 학생들은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느끼지 않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밀접한 문제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때조차 참여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885	850	614	522	2871
백분율	30.8%	29.6%	21.4%	18.2%	100%

: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454	789	923	705	2871
백분율	15.8%	27.5%	32.1%	24.6%	100%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조사 문항에서는, 60.4%의 응답자들이 “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는 문장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에 비해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지 묻은 문항에서는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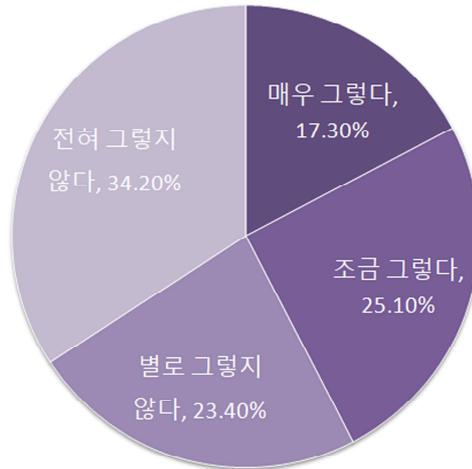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학생 대표가 참여하거나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긴 하지만, 학교 운영에 관련된 결정 과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열려 있지는 못한 현실을 시사한다. 정작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안건으로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모른 채로, 학생 대표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회의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 참여 절차에 그치진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밝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그나마 학생 대표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4곳 중 1곳 꼴(초·중·고 2,857개)에 불과했다.²⁾

**: 교사에게 혼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참고 넘긴 적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496	720	672	983	2871
백분율	17.3%	25.1%	23.4%	34.2%	100%

2) "국공립 초·중·고 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4곳 중 1곳 불과" EBS 2019.09.27.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162612/N>

“교사에게 혼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참고 넘긴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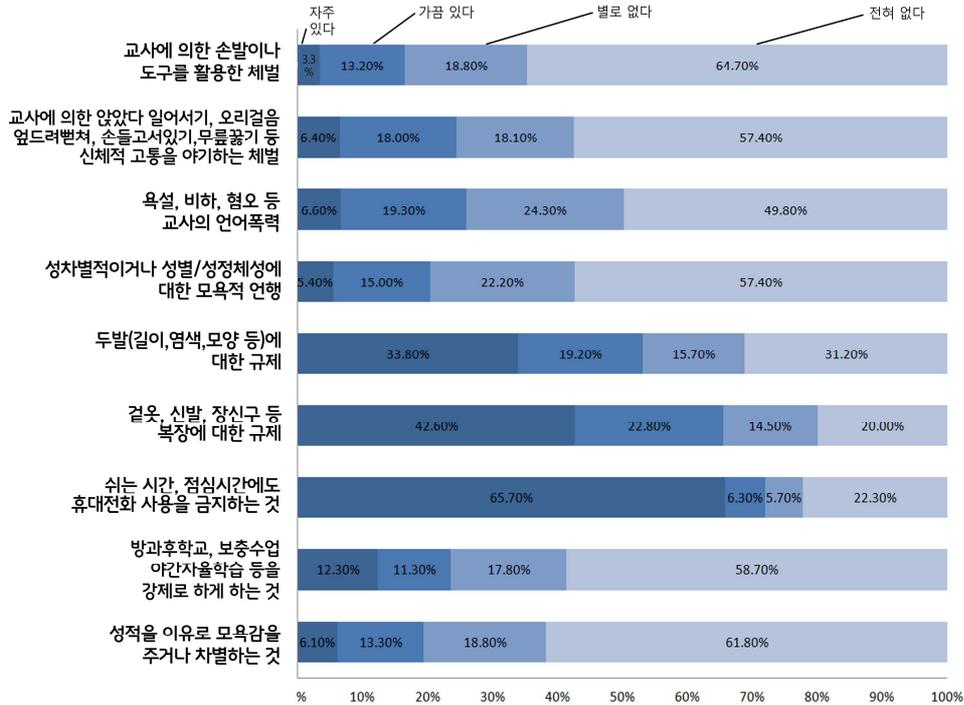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교사에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부당한 일을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42.4%(‘매우 그렇다’ 17.3%, ‘조금 그렇다’ 25.1%)에 이르렀다. 학교의 권력 관계와 수직적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이 여전함을 보여 준다.

학생 자치나 민주시민교육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미흡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 것이다.

□ 근절되지 않은 체벌, 여전히 일상적인 두발복장규제 ... 동의하기 어려운 규제가 학생의 삶 읊아매

대표적 학생인권 침해 문제들에 관해서 조사 참여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과 그 외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사이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겠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다?
: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95	378	540	1858	2871
	백분율	3.3%	13.2%	18.8%	64.7%	100%
조례 있음	빈도	19	76	117	594	806
	백분율	2.9%	11.0%	18.2%	67.9%	100%
조례 없음	빈도	76	302	423	1264	2065
	백분율	3.7%	14.6%	20.5%	61.2%	100%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때리는 형태의 체벌은 ‘자주 있다’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16.5%였다. ‘전혀 없다’는 응답은 64.7%로, 이를 제외하면 최근 1년간 3명 중 1명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은 법령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여야 정상임에도, 체벌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 현실을 보여 준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6.7%p 높았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앞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185	518	520	1648	2871
	백분율	6.4%	18.0%	18.1%	57.4%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24	85	123	574	806
	백분율	3.0%	10.5%	15.3%	71.2%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161	433	397	1074	2065
	백분율	7.8%	21.0%	19.2%	52.0%	100%

교사에 의해 앉았다 일어서기, 앞드려뺨쳐 등 부담스러운 자세를 지속하거나 동작을 반복하여 고통을 주는 체벌(소위 ‘간접 체벌’이라 부르는)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좀 더 많아,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4%에 이르렀다.

이러한 형태의 체벌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에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71.2%가 이러한 체벌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52.0%로 19.2%p나 차이가 났다.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체벌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욕설, 비하, 혐오 등 교사의 언어폭력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190	554	698	1429	2871
	백분율	6.6%	19.3%	24.3%	49.8%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47	132	199	428	806
	백분율	5.8%	16.4%	24.7%	53.1%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143	422	499	1001	2065
	백분율	6.9%	20.4%	24.2%	48.5%	100%

욕설, 비하, 혐오 등 교사의 언어폭력 역시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25.9%로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그리 드문 일은 아닌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근소하게 빈도가 적었으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성차별적이거나 성별/성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언행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156	430	636	1649	2871
	백분율	5.4%	15.0%	22.2%	57.4%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42	119	184	461	806
	백분율	5.2%	14.8%	22.8%	57.2%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114	311	452	1188	2065
	백분율	5.5%	15.1%	21.9%	57.5%	100%

특히 성차별적이거나 성별/성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언행도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20.4%였고, 전혀 없다는 응답은 57.4%에 불과했다. 스쿨 미투 운동을 통해 교사의 성추행만이 아니라 성차별적 언행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지금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두발(길이, 염색, 모양 등)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971	552	451	897	2871
	백분율	33.8%	19.2%	15.7%	31.2%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220	123	117	346	806
	백분율	27.3%	15.3%	14.5%	42.9%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751	429	334	551	2065
	백분율	36.4%	20.8%	16.2%	26.7%	100%

두발규제의 경우는 응답자 중 과반(53.0%)이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42.6%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 57.2%의 응답자들이 두발규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하였고, ‘전혀 없다’는 응답도 42.9%와 26.7%로 16.2%p 차이가 났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이 학생인권조례 미시행 지역으로도 영향을 미치면서 두발 관련 규정이 완화되거나 두발규제가 사라진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두발규제는 아직은 중·고등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인권침해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겹옷,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1224	655	417	575	2871
	백분율	42.6%	22.8%	14.5%	20.0%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308	174	132	192	806
	백분율	38.2%	21.6%	16.4%	23.8%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916	481	285	383	2065
	백분율	44.4%	23.3%	13.8%	18.5%	100%

겹옷이나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는 65.4%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하였고 20.0%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조금 더 적게 나왔으나, 두발규제 등에 비하면 적은 차이를 보였다. 겹옷,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1886	181	164	640	2871
	백분율	65.7%	6.3%	5.7%	22.3%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412	40	51	303	806
	백분율	51.1%	5.0%	6.3%	37.6%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1474	141	113	337	2065
	백분율	71.4%	6.8%	5.5%	16.3%	100%

수업 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할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응답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자주 있다’는 비율이 65.7%에 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56.1%, 없는 지역의 경우 78.2%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주 있다’는 응답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아서, 많은 중·고등학교 등에서 일률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 외에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도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의식이 학교 현장에서 부족함을 보여 준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학교급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352	324	511	1684	2871
	백분율	12.3%	11.3%	17.8%	58.7%	100%
중학교	빈도	106	88	189	842	1225
	백분율	8.7%	7.2%	15.4%	68.7%	100%
고등학교	빈도	246	236	322	842	1646
	백분율	14.9%	14.3%	19.6%	51.2%	100%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역시 23.6%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51.2%에 불과했다. 즉 고등학생 응답자 둘 중 하나는 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 등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352	324	511	1684	2871
	백분율	12.3%	11.3%	17.8%	58.7%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56	97	151	502	806
	백분율	6.9%	12.0%	18.7%	62.3%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296	227	360	1182	2065
	백분율	14.3%	11.0%	17.4%	57.2%	100%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18.9%, 없는 지역 학생들은 25.3%가 자주 또는 가끔 있는 일이라고 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강요를 경험하는 빈도가 다소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전체	빈도	175	381	540	1775	2871
	백분율	6.1%	13.3%	18.8%	61.8%	100%
조례 있음	공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50	98	155	503	806
	백분율	6.2%	12.2%	19.2%	62.4%	100%
조례 없음	사립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합계
	빈도	125	283	385	1272	2065
	백분율	6.1%	13.7%	18.6%	61.6%	100%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19.4%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비교육적인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본인이 학교에서 압수당한 물품이 있다면 모두 고르세요.
(복수 응답)**

	화장품 종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귀걸이, 머리핀 등 액세서리	겂옷, 담요 등 의류	만화책, 소설책 등 도서	
빈도	416	849	262	288	84	
백분율	11.3%	23.0%	7.1%	7.8%	2.3%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14.5%	29.6%	9.1%	10.0%	2.9%	
	담배 및 라이터	공 등 장난감 종류	공책이나 교재 등	기타 (없음)	기타 (그 외)	합계
빈도	66	225	149	1295	54	3688
백분율	1.8%	6.1%	4.0%	35.1%	1.5%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2.3%	7.8%	5.2%	45.1%	1.9%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함부로 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폭력적인 정책을 살필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 별도로 본인이 압수당한 경험과 물품에 대해 조사했다.

사적인 소지품을 규제, 단속하는 것을 넘어 압수까지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음에도 응답자 중에서 64.9%는 사적 물품들을 압수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학교에서 여전히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물품을 단속, 압수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보여 준다. 또한 압수 물품들 중 대부분은 휴대 전화 및 전자기기, 화장품 종류로 안전 등을 이유로 압수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응답으로는 압수당한 물품이 없다는 답이 다수 있어 별도로 집계하였다. 그 외에 압수당한 적 있는 물품의 기타 응답으로는 과자 등 음식물, 빗이나 고데기 등의 미용 도구, 아이돌 카드 등 취미와 관련된 물품이 나왔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모두 고르세요. (복수 응답)

	화장실 가기	생리결석이나 애플 때 조퇴	수업이나 지시사항에 대해 질문하기	헤어스타일, 옷차림, 화장 등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빈도	1138	1112	524	1495	1325
백분율	13.0%	12.7%	6.0%	17.1%	15.2%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39.6%	38.7%	18.3%	52.1%	46.2%

	연애나 친구 관계	방과 후 학교시설 이용	학교 밖 활동	기타(없음)	기타	합계
빈도	1249	768	910	167	43	8731
백분율	14.3%	8.8%	10.4%	1.9%	0.5%	100%
응답자(2871명) 중 백분율	43.5%	26.8%	31.7%	5.8%	1.5%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 학생들의 동의 여부 및 문제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왜 이런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선택하도록 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헤어스타일, 옷차림, 화장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의복장규제가 뽑혔다. 또한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 외에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일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비율이 72.0%인 상황에서 수업 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에 학교의 규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연애나 친구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과 후 학교 시설 이용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허락을 받게 하는 것 등이 학생들에게 동의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나타났다.

□ 학생들이 바라는 변화 : 선거권 확보돼야 학생의 삶 나아질 것

: 학생이 국회의원, 교육감 등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면
학교생활이나 학생인권이 좋아질 것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858	987	686	340	2871
백분율	29.9%	34.4%	23.9%	11.8%	100%

64.3%의 응답자들은 학생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면 학교생활이나 학생인권이 좋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사회 전반에 정치 혐오가 만연해 있음에도, 학생들은 참정권 보장이 학교생활이나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각의 기우와 달리 청소년들 다수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참정권 보장이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이번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과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고통과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나

○ ‘학생의 날’ 90돌을 맞이하는 2019년, 학생들은 여전히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과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이 못지않은 중요한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와 ‘권위적인 학교문화’였다. 학생 3명 가운데 1명꼴로 학교 수업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의 절반이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입시 스트레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 중압감은 배가 된다. ‘공정한 시험’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삶 전체가 입시제도에 휘둘리고 있다. 입시 성적에만 종속된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은 보람과 재미를 느끼기 힘들고,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 학교 수업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들도 진학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말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참아내는 법만 익혀야 하는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 힘들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와 진학에만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학생들은 ‘현재’와 배움에서 달아나고 싶어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18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은 경쟁과 시험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입시나 진학만으로는 대별될 수 없는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적 통제문화를 학교에서 걷어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장 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와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차별하지 않는 태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체벌, 두발복장규제, 휴대폰 압수 및 수거, 야간자율학습 강요와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는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로서 줄곧 근절 또는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미제정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물론 학교 현장의 변화가 일정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경험률이 조금은 낮아지는 반면 학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차별 정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침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조례의 힘으로는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학생들은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선거권을 획득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자신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선형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은 사회이고 학생들에게 정치 무관심을 강요해온 사회임을 고려할 때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경험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학생의 삶에 민주주의를! - 변화를 일구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폐기, 사회 불평등 격차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해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미 제출되어 있는 대안들부터 시급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1)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관계 회복을 위해 전국적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10년 경기도에서 첫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단 4개 지역(경기, 광주, 서울, 전북)뿐이다. 지역간 학생인권 격차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교육 격차만큼이나 인권 보장의 격차도 중요한 일이며, 어느 지역의 학교에 다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인권이 달라서는 안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인권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학교의 부당한 규제에 의한 학생들의 고통이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학생인권을 교육자치 또는 학교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로 맡겨놓고 있는 한, 교사-학생 간 관계의 왜곡이나 불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과 참여 보장의 수준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인권조례의 한계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사안이라는 말로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기구 설치 ▶학생인권의 내용과 기준 명시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2) 학생 참여 제도화

현재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변

화가 코앞에 와 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와 많은 교육청이 학생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형식적인 참여와 제한적인 학생자치 정책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에 대한 교실수업’으로만 좁혀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받지는 못한 채, 그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권한의 행사와 비중 있는 참여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삶에서 배우는 것’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진정한 참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의 의견을 간헐적으로만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9월에 열린 60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차별과 스쿨 미투 문제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현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 및 학교 규정 개정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보장³⁾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6차 권고의 주요 내용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한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년), 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SDG 목표 16.2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본질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하라.
-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라.
- (c) 법률 및 관행이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간접차별” 및 “징계적”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
-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하며,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하라.
- (e) 정서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전문가를 양성하

적 정보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 주요 문제들은 유엔이 연거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 권고에는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선거연령 하향 권고도 포함된 바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걸맞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즉각적으로 후속조치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대한민국 학생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입시 경쟁, 숨 막히는 규제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직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제도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학생인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학생의날 88돌’을 맞이하여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실시한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 결과(중고등학생 2400명 참여)에서도 드러난 바 있듯이, 청소년의 둘 중 하나 꼴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다. *현재의 촛불 정부는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참여함으로써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부와 사회는 학생들의 ‘현재의 삶’에 응답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부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고, 보고지침을 수립하라.

(f) 폭력 및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하라.

(g)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하라.

(i)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상담치료사 및 변호사 수 증원

(ii)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적 대리인 제공

(iii)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라.

<별첨> 2019 전국 학생 학교생활·인권 실태조사

본 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결과는 학생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교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되니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안전하게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2019.10.11.~10.25 / 참여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 문의: 02-365-5412

초·중·고·대학·대학원·연구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교육연구소·교육정책연구소·교육연구개발사업추진단·교육연구정보원·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출판물관리센터·교육과학기술부출판물관리센터출판물관리팀

※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는 학교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학교 운영 주체	① 사립 ② 공립
학교가 있는 지역 (가나다순)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⑰ 충북

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까?

질문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2)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옆드려뻗쳐, 손들고 서 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3) 욕설, 비하, 혐오 등 교사의 언어폭력				
4) 성차별적이거나 성별/성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언행				
5) 두발(길이, 염색, 모양 등)에 대한 규제				
6) 겹옷, 신발, 장신구 등 복장에 대한 규제				
7)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9)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				

2. 최근 1년간 본인이 학교에서 압수당한 물품이 있다면 모두 고르세요.

- ① 화장품 종류 ②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③ 귀걸이, 머리핀 등 액세서리
 ④ 겹옷, 담요 등 의류 ⑤ 만화책, 소설책 등 도서 ⑥ 담배 및 라이터
 ⑦ 공 등 장난감 종류 ⑧ 공책이나 교재 등 ⑨ 기타 ()

교육3주체 주요 발언록

▶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저는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 전 대표였던 이은선입니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조례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학교생활의 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합니다. 머리카락 길이 제한 때문에 다 마르지도 않았던 축축한 머리를 하루 종일 묶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발뿐만 아니라 복장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왜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합니다. 당연히 인권은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학생인권을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전북,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는 학생인권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학생들의 인권을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최근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무산된 일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인권의 보장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인권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누군가에게만 ‘혜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역 별로 격차가 나버린 학생인권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무관심해 온 국가가 제일 처음 보여야 하는 반성의 태도이겠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학생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학생인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 권정오(전교조 위원장)

발언록 없어 생략

▶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작년에 참교육학부모회가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했었는데 올해는 학칙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온도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기사. 해마다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남. 이 중엔 개인 사정이나 대학입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 부적응이 이유임

-이번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를 살펴보자고 이런 실태조사를 함께 해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풀어주시는 선생님이 많아지신다면 학교 문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봄. 이번 조사가 학생인권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는 안일한 시각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람

-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육 목적에 맞게 잘 따라오는 학생들만 데리고 결승점에 끌인시키는 곳이 아님. 학생 개개인의 소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기능 등에 대해 교육학 고전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

- 그런 관점에서 탄생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교권침해 사안 인지 아닌지만 심의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는 직접 강제전학과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기소-수사-판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음. 4개 시도 학생인권센터에 권리구제 창구 정도만 있을 뿐

- 설문조사에서 나온대로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해 달라는 것.

- 교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규율에 맞춰야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선생님이 다니고 싶은 직장,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규칙은 최소한으로 정하고 이를 함께 지켜가는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길 바람

-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아니라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바뀌어나가자